

【 민법총칙 】

1. 신의성실의 원칙[신의칙]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.
- ② 신의칙의 내용은 법원의 재판활동으로 구체화된다.
- ③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신의칙을 위반하지 않는다.
- ④ 당사자의 주장이 없을 때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신의칙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.
- ⑤ 취득시효가 완성한 사실을 모르고 그 토지에 관하여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한 점유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.

2. 태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모(母)는 태아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② 태아를 수증자로 하는 유증은 효력이 없다.
- ③ 타인의 불법행위로 태아가 출생하지 못한 경우 모(母)는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.
- ④ 부(父)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다.
- 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.

3.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이를 청구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실종자가 귀환하면 실종선고는 즉시 효력을 잃는다.
- ③ 부재자에게 선순위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.
- ④ 실종자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미 개시된 상속은 그 효력을 잃는다.
- 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이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·악의를 가리지 않고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한다.

4. 미성년자의 상대방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그가 이미 동의한 법률행위를 대리하지 못한다.
- ②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.
- ③ 악의의 상대방도 주인이 있을 때까지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를 거절할 수 있다.
- ④ 상대방이 혼인한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.
- ⑤ 선의의 상대방은 주인이 있을 때까지 미성년자에게 유효하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.

5. 미성년자 甲은 그의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없이 丙과 고가의 자전거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 丙은 甲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甲은 미성년을 이유로 丙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 - ② 丙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乙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 - ③ 丙은 乙이 추인할 때까지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.
 - ④ 甲이 속임수로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한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
 - ⑤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乙에게 추인 여부의 여부를 촉구한 경우, 乙이 그 기간 내에 응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.

6.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법인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 임의로 설립하지 못한다.
 - ② 법인은 상속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.
 - ③ 법인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 법인은 가해자에게 그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.
 -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.
 - 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해산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.

7. 법인의 이사와 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퇴임한 이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법인은 그 이사가 종전의 직무에 관하여 한 행위의 무효로 선의·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 - ②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포괄적으로 대리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이사가 여러 명일 때에도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 - ④ 이사의 부존재 또는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
 - ⑤ 감사는 임의기관이다.

8.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—<보 기>—

ㄱ.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.

ㄴ. 재단법인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설립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.

ㄷ. 재단법인의 설립은 정관의 작성과 재산의 출연을 요건으로 한다.

ㄹ. 재단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다른 재단법인에 분배하는 정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.

- ① ㄱ, ㄴ ② ㄴ, ㄷ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ㄷ ⑤ ㄱ, ㄴ, ㄷ, ㄹ

9.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이므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.
- ②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이 2개의 독립된 사단으로 나뉘어 종전 사단의 재산을 공동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③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그 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.
- ④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이나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사원총회의 결의를 얻지 않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.
- ⑤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일부 교인들의 탈퇴로 분열된 경우 종전 교회의 재산은 잔존 교인들과 탈퇴한 교인들의 공유이다.

10.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권이다.
- ②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.
- ③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주물에 부속한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.
- ④ 주물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효력은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그 설정 후의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.
- ⑤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자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그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.

11. 甲이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였다.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전에 그 사정을 잘 아는 丙은 망설이는 甲에게 X주택을 그에게 매도할 것을 적극권유하였다. 甲은 X주택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—<보 기>—

ㄱ. 乙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ㄴ. 乙은 甲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ㄷ. 乙은 丙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ㄹ. 丙으로부터 X주택을 매수·취득한 제3자는 그가 선의일 때에도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乙에게 주장할 수 없다.

- ① ㄱ, ㄴ
- ② ㄱ, ㄷ
- ③ ㄱ, ㄴ, ㄷ
- ④ ㄴ, ㄷ, ㄹ
- ⑤ ㄱ, ㄴ, ㄷ, ㄹ

12.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통정허위표시로 채권을 양도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양도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.
- ②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므로 그 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.
- ③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.
- ④ 통정허위표시로 매매한 매도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제3자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.
- ⑤ 통정허위표시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사실을 모른 제3자로부터 그 행위의 목적물을 양수한 전득자가 악의일 때에도 그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.

13. 제3자의 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하는 그의 피용자도 제3자가 될 수 있다.
- ② 제3자의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다.
- ③ 제3자의 사기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④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를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⑤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
14.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이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.
- ②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령을 거부한 때에도 그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으면 의사표시의 도달이 인정된다.
- ③ 사단법인 총회소집의 통지에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.
- ④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제한능력자는 그가 수령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.
- ⑤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는 경우 그는 「민사소송법」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.

15.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임의대리의 경우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수권행위를 철회하지 못한다.
- ② 본인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할 때에 무경험, 경솔,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.
- ③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대금청구권과 소유권이전의무만이 아니라 하자담보권과 취소권도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.
- ④ 임의대리인은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그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- ⑤ 본인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은, 다른 사정이 없는 한, 계약을 해제할 권한을 가진다.

16.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.
- ②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와 일치하여야 한다.
- ③ 대리권이 소멸한 때에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.
- ④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표현대리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.
- ⑤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.

17.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표현대리의 법리는 공법상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- ②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이는 표현대리의 주장을 포함한다.
- ③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대리권 없는 자의 법률행위가 유권대리로 전환된다.
-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.
- ⑤ 사실혼관계의 부부 일방은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.

18.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.
- ② 의사표시의 일부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무효이다.
- ③ 본인이 추인하면,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, 무권대리행위는 그 법률행위를 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.
- ④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받은 때에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.
- ⑤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 본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도 그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.

19.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대금반환청구권은 매매를 취소한 때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한다.
- ②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취소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한다.
- ③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그 취소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표의자가 사망한 경우, 그 상속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④ 일부취소에 관하여는 일부무효에 관한 「민법」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.
- 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,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
20.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급부가 이루어져야 한다.
- ② 무효의 가등기를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가등기는 처음부터 효력을 가진다.
- ③ 폭리행위로 무효인 법률행위도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.
- ④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이는 그 자체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.
- ⑤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다.

21.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조건부 권리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.
- ②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- ③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의 성취로 효력이 생긴다.
- ④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조건성취를 증명하여야 한다.
- ⑤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는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하고 나머지를 유효로 할 수 있다.

22.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점유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.
- ②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은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- ③ 2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권리는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단축되지 않는다.
-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
- 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이므로 2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.

23. 소멸시효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다른 사정이 없는 한, 부동산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약정한 대금지급일이 도래한 때부터 진행된다.
- ② 매수인이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은 때에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.
- ③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부터 진행된다.
- ④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그것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도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.
- ⑤ 소멸시효기간은 변론주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.

24.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시효중단이 효력을 미치는 승계인은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 후 그 효과를 받는 권리를 승계한 사람을 의미한다.
- ②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재심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.
- ③ 물상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한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채권의 시효중단은 효력이 없다.
- ④ 재판상 채무승인은 신청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.
- 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.

25.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당사자는 합의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.
- ② 원본채권의 시효소멸은 이미 발생하여 양도된 이자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- ③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이는 보증채무에 영향이 없다.
- ④ 소멸시효가 완성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.
- ⑤ 소멸시효가 완성한 후에 채무자가 이행기의 유예를 요청하는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이다.